

## 정책건의

- 동두천은 최근 경제 활력이 감소하고 있으나 지역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조업 기반 부족
  - 인구 감소 및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미군의 단계적 철수 및 이전 진행 중
  - 동두천 소재 제조업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에도 불구하고 영세성, 개별입지의 한계가 많았음
  - 기존에는 산업단지 지정면적이 작고 개별입지 공장이 다수를 차지하여 산업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으나, 국가산업단지 지정으로 기존의 한계를 극복할 것으로 기대
- 동두천 및 인근 경기북부 권역 산업생태계를 고려한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유치 가능 산업
  - 경기북부는 남부에 비해 첨단제조업, 정보통신업, 고차서비스업의 비중이 낮은 한편 섬유, 가구, 식료품 등 전통적인 제조업 위주로 발전
  - 산업연관분석 결과 제조업 중 섬유 및 가죽제품, 1차 금속제품, 금속가공제품업의 생산유발효과가 높으며, 컴퓨터, 전자 및 광학기기 제조업, 전기장비제조업,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의 부가가치유발효과가 높음
  - 기존 산업생태계를 고려했을 때 금속을 비롯한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소재, 부품, 장비 산업의 유치 필요
  - 금속에 국한되지 않고 고무, 플라스틱, 섬유 등을 포함하는 융복합 소재를 활용한 소재, 부품, 장비 산업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면서도 유망한 유치산업으로 판단됨
- 해외 기업 리쇼어링, 한국판 뉴딜 정책과 관련하여 중장기적인 대안 모색 필요
  - 해외 기업 리쇼어링은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융합, 스마트팩토리 도입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접근 필요
  - 한국판 뉴딜(그린 뉴딜, 디지털 뉴딜, 지역균형개발 뉴딜) 정책과 관련하여 동두천형 스마트그린산단 등의 방향으로 국가산업단지의 활로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

- 규제자유특구 지정, 스마트산업단지 조성, 지자체 주도형 지역균형 뉴딜, 스마트그린도시, RE100 산업단지 등 지원 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준비
- 동두천 및 경기북부 규제 완화를 통한 국가산업단지 인근 산업생태계 활성화의 기반 마련
  - 수도권 규제, 군사 규제, 미군 기지 등 경기북부는 산업 유치에 있어 규제의 걸림돌이 많아 단계적인 합리화 조치 필요
  - 제한적인 지역적 범위 내에서 성장촉진권역(가칭) 지정, 접경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부담금 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 고려 가능
- 본 과제에서는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대한 정책제안을 동두천시, 경기도, 중앙정부 차원으로 구분하여 제시
  - 동두천시: 제조업 집적을 통한 산업입지 기반 구축과 산업 고도화
    - 제조업 집적 → 지역 노동시장의 형성 → 산업연계망의 형성 → 첨단업종 유치의 선순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중장기적 목표로 접근
    - 섬유산업은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다고 해도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며, 다른 소재와의 융복합, 스마트섬유, 코로나19 등 전염병에 대응하는 의료 및 방역 부문에서 소재·부품·장비 산업의 한 축으로 고도화시켜야 함
    - 단기간 내 첨단제조업 및 고차서비스업을 유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, 향후 동두천 및 경기북부 지역에 기존과 다른 정주여건이 갖추어짐에 따라 핵심 인력들의 통근권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
  - 경기도 및 중앙정부: 기초지자체 차원의 역량을 벗어나는 수준에 대해서는 전폭적 지원 필요
    - 동두천 국가산업단지와 경기남부의 산업단지를 매칭하는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경기 남북부 산업단지 간 균형적 개발 추진
    - 동두천시의 첨단산업 집적지 형성을 위해 산단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앵커기업 유치를 위해 경기도 차원의 결단과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
    - 수도권-비수도권의 이분법적, 대립적 구도를 벗어난 실질적인 지역균형개발과 남북경제협력 대비 차원에서 접경지역의 산업 거점 형성을 위한 지원

**키워드** 경기북부, 산업연관분석, 규제 완화, 한국형 뉴딜, 스마트그린산단